

강행-유예 외줄타기... 세법원칙 지켜야 vs 투자자 보호부터

<정부>

<개인>

금융 이슈리포트

가상화폐 과세

내년 가상자산소득 분리과세 예정
투자자 “관련 제도·법 정비 먼저”
정부 “과세 유예시 형평성 어긋나”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투자자 “제도적 장치부터”

문제는 이를 두고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



지난달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뉴시스

칙에 동의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청원글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 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청원은 이날까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직 암호화폐 관련 제도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마련한 후 세금을 징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투자자들은 성급하게 과세를 하는 것보다 추후 성장가능성을 반영해 상장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해외 금융회사의 경우 가상자산 수탁, 거래, 발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페이팔(Pay Pal)은 지급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의 거래를 도입하고 2021년 상반기 중 이를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DBS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Exchnage)와 기관·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발행, 가상자산 매매 및 보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DBS디지털거래소를 설립한다고 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논문을 통해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큰 틀에서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과세 방법을 설계한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렇다면 왜 소득 구분을 양도소득으로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고 하는지의 의문이 제기된다”며 “결과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세금부과 불가피”

그러나 정부는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세형평성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화폐나 유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행 세법은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기타소득대상은 미술 음악에 속

하는 창작품 외에도 복권, 경품 추첨권도 포함된다. 특히 21조 3항은 기타소득은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는 2023년부터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경우 많은 투자자 중 가상자산 투자자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6919만원선이다. 이더리움은 3533만원대로 하루 새 0.8% 포인트 올랐으며, 도지코인은 470원으로 전일 대비 1.08% 상승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자 보호 직접 나선다

빗썸 신규종목 가격 안정성 모니터링 업비트 원화출금 지연정책 실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투자 열풍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전히 투기 수단일 뿐이라며 ‘제도화’를 미적대는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최근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신규 종목 상장과 함께 물량을 대량 매도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그러나 주식 시장의 보호예수 제도를 따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가격 안정성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가 상장 전후로 기준 유통량 이상의 가상화폐를 입금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며, 증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빙 절차를 통해 출치를 밝혀야만 거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접속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대량의 가상화폐 입금과 출금 요청 시 거래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보호를 목표로 증권시장과 같이 신규 상장 가상화폐에 대해 보호예수 정책을 시행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완 및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도 최근 외부 가상자산 지갑에서 입금할 경우 72시간 동안 원화 출금하지 못하는 지연정책을 실시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세가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 해외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차익거래를 막기 위한 것. 또 무제한 원화 입금이 가능했던 기존 기준에서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제한했다.

이 외에도 두 거래소를 포함한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거래소들도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이 스피싱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시도를 차단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소들이 셀프규제를 만드는 배경으로 정부의 시장 보호를 위한 규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부터 업계에서 꾸준히 업계 정의를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업권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업권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투자자 보호 방안부터 먼저 실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 2면 ‘코인 빛투에 가계대출’서 계속

대출 늘어가는 중소기업 자금 안정되는 대기업

◆대출로 버티는 중·소상공인 늘어
이밖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며 은행대출로 연명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업황 개선세와 달리 중·소상공인은 연초부터 자금부족이 맞물리며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말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소호)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623조9946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 대출잔액은 342조7723억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81조2222억원이다.

특히 올 들어 자영업자와 중기대출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에서 개인사업자가 빌린 돈은 1월 1조6398억원, 2월 3조211억원, 3월 2조4860억원, 4월 3조2313억원으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기대출도 2월 3조31340억원, 3월 2조2808억원, 4월 4조7995억원 늘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올해 중기 대출 규모 증가는 8조308억원에 이른다.

반면 대기업은 자금흐름이 안정세다.

연초만 해도 대기업들 역시 5개 시중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1월 1조 6006억원이었으나 2월 7627억원으로 감소한 뒤, 3월에는 오히려 1조 7619억원을 갚았다. 4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은 연초 이후 1조 1046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나유리 기자

“입점 가게·라이더 경쟁력 판가름”

>> 1면 ‘배달앱에 꽃힌 이커머스’서 계속

당달에 고객 수도 많아졌다. 누적 회원 수는 무려 40.9배 급증했으며, 월별 주문자 수와 월별 주문건수 역시 각각 7.5배, 3.4배 성장했다.

배달앱에 진출한 마지막 주자는 티몬이다.

티몬은 지난달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에 배달서비스 기획·운영 업무담당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올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배달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티몬은 채용 공고를 통해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티몬 배달서비스를 이끌어갈 인재 모집한다”며 “배달 플랫폼 서비스 기획·제휴 관련해 업무를 해

본 유경험자를 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전략과 프랜차이즈 제휴 및 영업 등 관련 인력을 채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장을 추진하며 배달 사업을 새 먹거리로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배달 시장 규모는 15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0% 성장했다. 배달 시장 진출로 몸집을 키우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티몬 측은 “배달 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은 맞지만, 오픈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고객에게 가치와 경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과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에는 배달앱에 입점한 가게 수와 얼마나 빨리 배달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라이더와 가맹점 모집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